

2013 이슈페이퍼 << 연구보고서 201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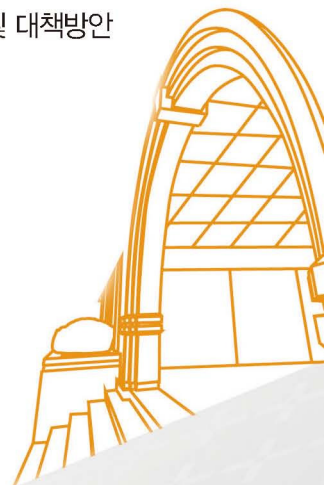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현황과 대책방안


수행과제명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 · 제도 및 대책방안
과제책임자 • 윤덕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현황과 대책방안*

수행과제명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과제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

UN 인신매매방지협약이나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의 인신매매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상황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한인 성구매자의 상대방으로서의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를 살펴 보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 들어 국가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신매매가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윤덕경·장미혜·박선영(2013).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 기구의 보고서에서는 그 심각성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 인신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먼저 나타났으며, UN은 2000년 11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 각 국가에서는 이 의정서를 비준해야 이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2000.12.13. 서명을 한 후 인신매매 관련법의 정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 최근에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형법개정을 통해 인신매매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인신매매에 관한 국내법 정비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음.
- 형법개정으로 인신매매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나 형법에 새로 도입된 조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서 UN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수준의 범위로 확대되지 못하며, 인신매매의 ‘매매’에 함몰되어 매매나 국외이송한 행위만 범죄로 규정하고 의정서상의 모집, 운반, 은닉, 인수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을 살펴 보고,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을 모색하였음.

-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UN 인신매매 방지의정서나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상황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한인 성구매자의 상대방으로서의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를 살펴 보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주요 연구방법은 필리핀, 미국, 호주, 태국, 스웨덴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인신매매 관련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미국에 송출된 한인여성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피해자와 한인 성구매관광 대상으로서의 태국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와 법 집행상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음. 경찰, 검사, 변호사, 연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11명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현황

- 인신매매에 관한 지구적 보고서
 -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의 2012년도 인신매매에 관한 지구적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인 범죄임.
 - 인신매매의 목적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성착취 목적은 58%, 강제 노역은 36%, 기타 형태는 6%, 장기제거는 0.2%였음.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136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희생자들이 전 세계 118개 국가에서 감지되었으며 460개의 다양한 인신매매 경로가 파악되었음.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 미 국무부의 201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186개 국가에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었음.
 - 각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내보내는 송출국(origin), 이들이 거쳐가는 경유국(transition),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도착하여 착취가 이루어지는 목적지국(destination)으로 분류되며, 송출

국은 14개국, 목적지 국가는 12개국, 송출국이며 경유국은 4개국, 송출국이며 목적지 국가는 23개국, 송출국이며, 경유국이며 동시에 목적지 국가는 113개국이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국가는 2개국이었음.

- 한국은 송출, 경유, 목적지 국가 전부에 해당되는 국가로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 인신매매의 개념

- ‘인신매매’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가축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두어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함. 이러한 의미는 인신매매를 사고 파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서 인신매매를 한정적으로 이해하는 단점이 있음.
- 인신매매 개념을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국제규범인 ‘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의 요건은 착취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단은 강박, 납치, 사기, 권력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등이며, 행위는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임.
- 국제규범에서 사용하는 ‘Trafficking’의 의미는 우리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매매’라는 뜻과 상이하고, ‘Trafficking’은 ‘매매’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규정한 국제규범상의 ‘Trafficking’이라는 용어를 인신 ‘매매’라고 번역해서 논의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 달리 지나치게 규제 대상인 행위를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함.

● 인신매매 관련 규정의 도입

- 형법상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경우는 행위자에게 성적 착취나 성매매 등의 불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태양을 “부녀자를 대가를 받고 사실상의 지배를 상대방에게 이전”하

는 ‘매매’ 행위로만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그 행위의 수단에서도 위계, 위력뿐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보수나 혜택의 제공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구성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형법에 신설된 인신매매죄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의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말하는 ‘매매’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동 조항을 실제 사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신매매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법에 ‘고리이자에 기인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인신매매로 본다’는 등 인신매매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며, 나아가 법원이 인신매매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단 시 위와 같은 기준이 내포된 판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추후 인신매매죄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인신매매 관련 공식통계

- 인신매매와 유사한 죄로 접수, 처리된 사건은 2012년 현재 9,338 건이지만 이 중 인신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예술홍행(E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거나 단속된 사건은 대부분 예외없이 성매매 강요나 감금행위가 문제되었고,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로 수사, 기소된 사례는 아주 드물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규범

- ‘UN 인신매매방지협약’
 - 이 의정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대응과 관련하여 인신매매를 정의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

첫 번째 국제 도구로서 2000년에 제정되었음.

- 인신매매의 정의, 인신매매의 적용범위, 인신매매의 범죄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의 예방과 협력, 기타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럽연합의 “유럽평의회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of 2005)”
 - 유럽연합은 상업적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의 인신매매 근절,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원조, 인신매매 목격자 보호, 인신매매 사건의 효과적인 조사와 기소,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목표로 2005년에 “유럽평의회 협약”을 제정하였음.
 - 피해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면에서 본 협약은 유엔 인신매매 부속 의정서보다 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유엔 피해자 식별 가이드라인
 - 인신매매의 방지와 예방에서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는 많은 국가가 불법이민자, 자발적 성매매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내는 식별 시스템의 구축이 촉구되고 있음.
 -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은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톨킷(2008)”을 발행하여 각 회원국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장소와 시장에 따라 연령이 다를지라도 30세 이하일지도 모른다.’, ‘한 사창가에서 다음 사창가 또는 다양한 장소의 근무지로 이동할 지도 모른다.’, ‘그들이 근무지, 숙소 등에 가거나 돌아올 때 언제나 호위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착취자들로부터 “소유”(ownership)을 나타내는 문신 또는 표시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등으로 식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및 정책현황

● 필리핀

- 필리핀은 여성아동의 성착취와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목적지이자 경유지로서 최소수준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인신매매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3년 인신매매금지법(the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가사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사노동자법(Domestic Workers Act)을 2013년에 제정하였음.
- 이러한 정책을 보면 인신매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전화를 상설하고 피해자가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성착취적 또는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아 인신매매를 금지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개정된 인신매매금지법이 실효성을 얻기 위한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관련공무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며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법당국과 상호간 협조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

- 미국은 인신매매의 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이나 인신매매금지 및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00년 포괄적인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및 엄격한 범죄처벌 등을 위해 2003년, 2005년,

2008년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50개 주가 이 연방법을 반영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해 놓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인신매매예방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인신매매방지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비자취득관련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원인 및 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고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인신매매금지를 위해 더욱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인신매매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개선, 관련기관간의 협조강화, 외국인들의 모국어로 된 서비스 제공, 인신매매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강화, 인신매매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임시/ 장기 서비스 제공강화 등임.

● 호주

- 호주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성 착취적인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면서 이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유학생 중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성 착취와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호주는 형법과 이민법에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노예, 노예와 같은 환경과 인신매매법(Slavery, Slavery-like Conditions and People Trafficking)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건강,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활을 위해 구직, 어학강의, 교육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해보상,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인신매매금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배상에 대한 계획,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조직과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아동인신매매금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강화, 강제혼인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반시민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고양 등임.

● 태국

- 태국은 2004년에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을 제정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음.
- 인신매매범은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80,000바트 이상(약 320만원) 200,000바트 이하(약 8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심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 놓았음.
-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는 “특별조사부”와 태국 왕립경찰 산하의 “인신매매방지부서”이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관할하는 사회개발안전부는 인신매매방지기금을 기반으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소를 설치/운영하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현재 9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와 76개의 임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의, 식, 주, 상담, 제한된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시민단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소도 운영되고 있음.

● 스웨덴

- 스웨덴은 성매매의 목적지, 근원지이며 노동착취적인 강제노동의 목적지로서 성착취적 또는 노동착취적인 인신매매금지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성적서비스 구매금지법에 따라 2002년부터 성구매자를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2002/629/ RIF을 준수하기 위해 관

련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허가에 관한 지침 2004/8을 준수하고 있음.

- 2008년 성매매와 성 착취적인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가액션플랜을 수립하여 5개 영역에서 36개 조치를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영역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강화, 인신매매예방 강화, 사법시스템의 기준강화와 효율성 개선, 국내와 국제협력 강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의식고양 등임.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서비스를 보면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서비스 제공, 보상제도, 피해자 자활과 안전귀국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피해자 긴급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 집행사례조사

●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 관련 법집행사례조사

-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대상 법집행 관련 사례조사를 위해 서면으로 전문가 면접을 실시하였음. 경찰, 검사, 변호사, 연구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등 11명을 대상으로 형법의 인신매매조항 도입에 따른 인신매매 단속 증가여부, E-6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 온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집행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최근 형법개정으로 인신매매처벌규정이 명문화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인신매매의 단속과 처벌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인신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이나 ‘매매’에 관한 해석기준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외국여성들의 국내 인신매매범죄 피해나 우리나라 여성의 외국 인신매매범죄 피해관련 담당부서는 경찰청 외사국이나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이며, 예술홍행(E6)비자와 관련된 공연추천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7인으로 구성된 공연추천소위

원회가 담당함.

-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혐의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인신매매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 성매매알선죄로 인정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체류자격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이 유예되어 임시적인 체류연장은 가능하나 재판기간이 끝나면 강제송환을 하는 것이 보통임. 강제송환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체류나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여성이 E-6 비자를 통해 국내 외국인전용업소로 오게 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가수를 모집하거나 연예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한국에 오지만 공연과는 상관없이 외국인전용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고용되고, 주스 할당제와 바파인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교묘한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E-6비자는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루트로 이용되어 왔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집행의 한계와 문제점으로는 법 개정시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한 적극적인 혐의입증이 미흡한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국내체류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E-6 비자에 의한 연예활동 취업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법 집행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 관련 법 집행 사례조사
 - 한국인의 성착취적 인신매매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와 인신매매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캘리포니아에

서의 가해자 처벌 내용과 한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 집행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신매매 현장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임. 또한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법조계 인사, 여성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의 현실적 상황들을 가늠해보고자 하였음.

-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집행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찰청 svu부서의 인신매매 관련 역할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의 인신매매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캘리포니아 경찰청에서는 특별 피해자 부서(이하 svu)의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한 전담 인력을 충원했음. 과거 특별 피해자 부서는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수사관은 없었고, 인신매매 범죄 수사는 이 전에는 마약, 약물, 도박, 매춘 등을 다루는 Vice Crimes Unit에서 담당하는 많은 분야 중 하나에 불과했으나 인신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0월 새로 세 명의 풀타임 인신매매 수사관을 배치했음. 국토안보 수사국과 같은 연방 법 집행 기관은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어 훨씬 많은 경험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확장된 특별 피해자 부서에서는 타지의 지역 법 집행 기관, 연방 법 집행 기관, 비정부단체 등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는 일을 함.
 - 지방검찰청에서의 인신매매 관련 역할을 보면, 인신매매 범죄에 관하여서는 크게 정책(policy)과 실행(practice)에 관한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검찰청의 업무는 실행에 해당하는데, 주로 비정부단체, 검찰총장(Attorney General's office), 시장(Mayor's Office), 공공보건부(Dept of Public Health), 여성의 지위에 관한 부처(Department on the Status of Women)와 협력하는 일과 샌프란시스코 경찰청과의 합동으로 마사지 업소(massage parlors) 등의 단속에 참여해 인신매매 여부를 조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료를 배포하는 일(Tara Anderson)을 하고 있었음.

- 비영리 기관에서의 인신매매 관련 역할을 보면, 경찰이 이들을 범죄현장에서 구출하고 검찰이 가해자 기소 등의 절차 과정을 거치면, 피해자들은 비영리 기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음. 이들 비영리 기관들은 정부에서 기관운영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고, 주로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의 상담 및 재활을 돕고 향후 T비자나 U비자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비영리 기관 면접에서의 질문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해당기관을 찾아오게 되는 경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질문하게 된다고 하였음.
- 인신매매 피해 관련 법 집행의 한계와 문제점
 - 편협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신매매(trafficking)와 밀입국(smuggling)을 구분하는 방법은 미국으로 건너올 때 모든 조건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었으며 자의(自意)로 왔는지로 구분하는데,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고용 및 노동 상태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아는 상태로 오고, 브로커가 성매매 활동에 대한 임금, 포주가 가져가는 몫, 집 렌트비 등 계약의 모든 조건을 여성에게 알리고 그에 여성이 동의를 하고 건너오는 경우는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입국시 이런 노동조건을 모르고 들어왔다면 이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문제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기 위해 돈을 내고 오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것임.
 - 가해자 처벌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성착취적 인신매매 범죄 자체의 특성상 지하에서 은밀하게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적발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불법 이민자로 판정받아 강제 출국이 될까봐 신고를 꺼리고 있고 특히 최근 2005년 Operation Gilded Cage 전후로 몇몇 중요한 변

화가 있었다고 함. 인신매매범의 업소운영 방식도 달라졌고 여성들을 감시하는 방식도 달라졌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반응 또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범죄 행위는 줄어든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가 보다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함.

- 정부 보조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피해 여성들이 현지에 정착하기에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부족하고, 그나마 단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것이어서 피해여성들이 다시 성매매 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함.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문제는 남아있음. 이들이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한국 대사관은 필요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기관 관계자들은 성착취적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한국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지에 정착하려는 피해여성 이던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피해여성이던지 한국정부가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 집행 사례 조사

-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 관광지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과 법 집행 사례를 살펴 보았으며, 국내 인신매매자 처벌을 위한 업소 단속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단속된 적이 없으며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의심되는 업소들 역시 단속된 적이 없음. 따라서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에서의 피해자 발생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실례는 찾아볼 수 가 없으며, 경찰청 인신매매 방지부에 신고가 접수된 한국으로 송출된 태국 여성의 인신매매 사건만이 보고될 뿐임. 본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관련된 업소

와 피해는 다를 수 없지만 태국의 인신매매법과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황은 살펴볼 수 있었음.

- 법집행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신매매방지부서(Anti Human Trafficking Division)는 2008년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됨으로서 생겨난 부서인 만큼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인신매매범을 체포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인신매매 핫라인 1191을 설치하여 24시간 사건을 접수받고 외국인들의 접수도 받기위해 49명의 통역관을 훈련시켰으며,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총 314건의 사건을 기소하였으며 그중에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노동착취나 구걸보다도 많은 226건이었음.
- 법무부 산하의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는 특수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2008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인신매매 사건도 특수사건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음. 인신매매의 통제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2011년에는 조직을 확대하여 “특별범죄 3국(The Bureau of Special Crime 3)”을 신설하여 마약통제센터(Narcotic Suppression Center)와 인신매매방지센터(the Anti-Human Trafficking Center)등 두 개의 센터를 통해 마약과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있음.
- 2008년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태국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인신매매 보호소가 총 9개이고 그중에 4곳은 여성을 위한 기관이며, 4곳은 남성, 하나의 소년을 위한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음. 피해자 보호소는 사회내 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사회개발안전부’산하의 “사회개발 및 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개발 및 복지국 내에 “인신매매 방지와 억제를 위한 국가 활동센터(National Operation Center on Prevention &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NOCHT)”에서 경찰, 특별조사부, 비정부기구의 회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할 부서 내에 인신매매 피해자의 여부를 식별하는 팀이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진단함.

-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서 국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로 보내져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태국 지역 및 국제 시민단체들은 민영 피해자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이 18세가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인 파타야 인신매매 및 아동학대 방지 센터 (Human Trafficking and Child Abuse Center) 등이 대표적인 기관임.
-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 집행의 한계와 문제점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식별에 관한 문제는 태국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며,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가 각 국가별로 체계적인 피해자 식별 시스템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태국은 식별 시스템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전히 식별 시스템의 미흡함과 체계적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고 있음.
 - 불법 이민자 소환 조치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축소의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은 인근 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높고 임금이 높은 지역이며, 인근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이든 인신매매 형태로든 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본국으로의 송환을 꺼려해서 신고를 안하거나 잠적하고, 도망가고 있음(US Department of State, 2013).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태국 정부가 이러

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노동정책상의 변화가 필요함이 권고되었음.

- 조사기관의 부정부패로 인한 인신매매 사건의 은폐와 이로 인한 피해자 감소의 문제에 관련하여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과 특별조사부의 직원이 업소를 비호하기 위해 업주의 뇌물을 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경 수비대와 지역 경찰이 인신매매에 가담하는 사건도 발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인신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립/민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의 한계와 관련하여 현재 국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의 방침은 피해자의 외부 출입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방침이 오히려 피해자가 인신매매 보호소에 배치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영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소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따르며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아 운영자의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음.
-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과 관련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태국 국민의 인식 부족도 문제이지만 관련된 형사사법기관이나 업주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성 있는 법집행을 방해하는 요소임. 따라서 태국 정부는 매년 관련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에 대한 인신매매 인식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의 해외 성매매 단속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은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되고 있음.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태국 내 한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유흥업소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태국 내에서 경찰이나 특별조사부에 의한 인신매매로 단속된 업소는 하나도 없음. 한국인들에 의한 해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즐겨찾는 가라오케나 마사지 숭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국내 경찰력의 한계로 이러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성 착취적 목적의 인신매매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3 정책제언

제안1)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 법 개정시 인신매매 정의규정 추가
 - 인신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이나 ‘매매’에 관한 해석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매매에 관한 해석을 대법원의 부녀매매죄 판례에서 처럼 해석한다면 여전히 너무 협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임.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시스템 마련
 - 피해자 식별에 관한 문제는 태국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임.
 -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집행하는 사무국인 유엔 마약 및 범죄국이 내놓은 인신매매 식별 시스템과 국제이주기구에서 사용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을 토대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한 적극적인 혐의입증 유도 필요
 -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혐의입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인신매매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 성매매알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피해자들이 신고 등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축소 해석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수사, 재판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된 해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성구매행위 처벌조항 신설

- 우리나라 남성들의 동남아 관광에 의한 성구매행위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방지정책은 없는 실정이며, 현재도 형법상 속인주의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성구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성구매자의 처벌에 대한 경고와 정책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법상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여권법 개선방안

-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서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동 규정에서 ‘외국에서의 성매매행위’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외 성매매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위법한 행위’ 규정을 두는 것과는 별개로 외국에서 범한 일정한 ‘범죄행위’ 예컨대 성구매행위로 인한 여권발급제한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 해외 성매매 관광여행 규제방안

- 해외 성매매 관광여행의 여러 경로 중 기획여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현재 관광진흥법상 명시적으로 해외성매매관광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근거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에 대한 사유로서

‘해외 성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는 독립적인 위반의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며,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여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이 필요함.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으로서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소양교육과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동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해외 성매매 시 행위자는 국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받고,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련 종사자가 취업의 제한, 형사법적 처벌 등의 제재를 부과받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제안2)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운영상의 개선방안

●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방안

-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국내체류 보장대책 마련이 필요함.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해 강제송환할 것이 아니라 국내 체류나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호주의 경우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에서 재판시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영주권 보장, 취업알선 등을 해 줌.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인신매매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등에는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고, G-1 비자를 발행해 주는 제도가 있으나 체류와 활동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허가없이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E-6 비자에 의한 연례활동 취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6 비자를 통한 국내 외국인전용업소 유입은 전형적인 외국여성의 국내 통로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E-6비자는 1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루트로 이용되어 왔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이 비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 법 집행공무원에 대한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함. 인신매매를 정확하게 알고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법원 등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 인신매매 중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매매방지의 인식제고를 위한 성인지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나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으므로 법 집행공무원들의 인신매매 관련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함.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형사사법 기관의 인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매년 관련 형사사법 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에 대한 인신매매 인식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태국 정부의 정책 수행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하겠음.

● 해외 송출된 한인여성 인신매매피해자 지원방안

- 인신매매 입증을 위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술유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하는 해외 성매매의 경우 현지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아니면 혐의입증에 앞서 인지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해외 발생 사건의 특성상 한국 경찰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알선자 및 업주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함. 미국으로 송출된 한인여성 인신매매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불법 이민자로 판정받아 강제 출국이 될까봐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임. 성매매여성들의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인신매매의 입증사례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인신매매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간 경찰공조가 필요함. 해외 송출된 한인여성의 인신매매사건에는 목적국인 호주, 미국경찰과 송출국인 우리나라 경찰의 공조가 필연적임. 인신매

매사건의 목적국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성매매여성 단속시 인신매매 피해자 발견과정에 한국경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사후 처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가 일상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에 관한 단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국의 해외 성구매자 단속과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 한국의 해외 성구매자 단속강화가 필요함. 한국은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태국 내 한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유흥업소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태국 내에서 경찰이나 특별조사부에 의한 인신매매로 단속된 업소는 하나도 없음. 성 착취적 목적의 인신매매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요구됨.
- 한국인에 의한 해외 성구매 상대인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이 필요함. 한국인에 의한 해외 성구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국가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제안3)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간, 정부간, 경찰간, 민간단체간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
- 최근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예로 태국을 중심으로 한 6개국 인신매매방지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미군의 출입금지(Off Limits)정책이 있음.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강구

- 인신매매피해자가 목적지국에 남는 경우 그 나라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가동되고, 송출국으로 돌아 오는 경우 목적지국에서 인정된 인신매매피해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실무자간의 철저한 연계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해외성매매 단속시 호주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호주에서 가해자의 인신매매범죄성이 인정되어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정되었던 여성이 국내에 들어 오면서 가해자가 성매매알선죄로 경감되어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던 바, 사건에 대한 원칙은 국가가 달라 지더라도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사건기록의 제공 등 공조체계 구축은 필연적이라 할 것임.

● 국가간 형사사법 공조체계의 확대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사건의 경우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국내에서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속한 수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내국인이 외국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사실의 신속한 통보와 국내 수사를 위한 기록 및 재판서류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록 및 서류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속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필리핀, 호주, 미국, 태국, 스웨덴의 입법례 검토를 통한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합의 발견

-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미국내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 태국의 한인 성구매 상대방으로서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 보호 법적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운영상 개선방안 도출
 - 우리나라가 관계되는 인신매매문제 현황과 문제점 점검을 통한 제도운영상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에 관한 정책담당자 및 일반인의 인식 확립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 외국 입법례와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국가·지역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 국가간, 정부간, 경찰간, 민간단체간 공조체계 마련을 위한 실행력 제고
-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가간 성착취적 인신매매 발생에 관한 원천국, 경유국, 목적지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을 정비하고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정책적 방안 제시를 통한 인신매매 근절에 기여
 - 인신매매의정서 비준에 대한 동참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참고자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4.
- 김은경(2012),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과 성매매 규제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딜레마”,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토론회원고.
- 두레방(2010),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 맥스웰트먼(2012), “성매매금지와 인신매매 척결”, 『여성과 인권』7호, 여성인권진흥원.
- 메리루실 설리반(2011),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 호주 성매매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인권』제6호, pp.154-18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박선영·박찬걸(201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설동훈 외(201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어진이·최민영(2012),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3), 『2013 성매매방지 국제 심포지엄』.
Retrieved from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 윤덕경·황정임·황의정·박찬걸·배삼희(2013),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장준오 외(2009),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준오 외(2011), 『국제 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한국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희진(2013),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세미나 - 예술홍

행비자(E-6) 입국 피해여성 사례 중심 - ",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세미나 자료집, pp.7-46.

차종천 외(1993), 『인신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경수(2013),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세와 주요 현안 과제,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KDI 자료집, pp. 11~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매매관련법정책 및 실태
: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한국은행(2013),

2013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 보도자료(<http://www.bok.or.kr>)

한혜진(2013),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 관광과 법적 대응방안 모색, 고려대
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69권0호 (2013), pp.1-32

Action Plan Against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
Ministry of Intration and Gender Equality Sweden

Anti Human Trafficking and Child Abuse Center. <http://www.atcc.or.th/>

Commonwealth of Australia, Trafficking in Women for Sexual Servitude.

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2012), DSI Annual Report 2011.

ECPAT International(2011), Global Monitoring Report on the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Retreived from

<http://www.ecpat.net/ei/Publications.asp?groupID=15>

International Labor Office (2012), Global Estimate of Forced Labor

Retreived from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
ents/publication/wcms_182004.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182004.pdf)

Kamala D. Harris(2012), The State of Human trafficking in California.

Li, V. F. (1995), CHILD SEX TOURISM TO THAIL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Pacific Rim Law & Policy Association vol(4) 2

Mattar, M.Y.(2007), Child Sexual Tourism: The Appropriate Legal Response III

Bilateral Conference “Parallel Worlds” Tijuana - San Diego Child Sexual
Tourism and Other Forms of Trafficking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ecurity (2013), Thailand Human
Trafficking Shelter.

http://www.m-society.go.th/en/content_detail.php?pageid=223

Nair, S. (2007), Child Sex Tourism U.S.DEP'T.OF JUSTICE, CHILD
EXPLOITATION AND OBSCENITY SECTION(CEOS),

Retrieved from

<http://www.usdoj.gov/criminal/ceos/sextour.html>

O'Gladly,R.(1992), The Rape of the Innocent. Thailand: ECPAT.

Protection Project,(2007),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aul H.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International child sex tourism:Scope of
the problem and comparative case studies. Retrieved from

http://www.protectionproject.org/sites/default/files/JHU_Report.pdf

Protection Project (2012), Review of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Retrieved from

<http://www.protectionproject.org/wp-content/uploads/2012/07/TIP-Review-2012-Final.pdf>

Royal Thai Police (2013), Annual Report of Anti Human Trafficking.

Sachs, A.(1994), The Last Commodity, Child Prostitution in the Developing
World, World Watch July/Aug.1994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Mission to Australia(2012), UN Doc A/HRC/20/18/Add.1, para 50, 82.
(<http://www.ohchr.org/EN/Issues/Trafficking/Pages/Visits.aspx>viewed 24
September 2012)

UNODC (2008), Toolkit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Global Programme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Retrieved from

http://www.unodc.org/documents/human-trafficking/HT_Toolkit08_English.pdf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2009),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09, page11.

UNODC(2009),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12), Project Childhood Project

Retrieved from

http://www.unodc.org/documents/eastasiaandpacific//2011/12/childhood/Project_Childhood_Web_slides_2_5_January_2012.pdf

UNODC (2013),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12 Retrieved from

http://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glotip/Trafficking_in_Persons_2012_web.pdf

<http://www.usfk.mil/usfk/?AspxAutoDetectCookieSupport=1>

U.S. Department of State, 201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Release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2/index.htm>

U.S. Department of State(201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201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ko.wikipedia.org>

<http://www.humanrights.gov.au>

<http://www.legislationline.org/topics/subtopic/46/topic/14/country/1>

<http://www.usfk.mil>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관계부처 : 법무부 인권국, 체류관리과, 국제형사과
